

한일 경제관계의 현재와 미래

* 이 자료는 무코야마 히데히코(向山英彦) 일본총합연구소 상석주원연구원이 닛케이비즈니스 온라인「국교정상화 50년 한일의 지평(15.6.22)」에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

○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국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한일관계도 변해 왔으며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분석과 대응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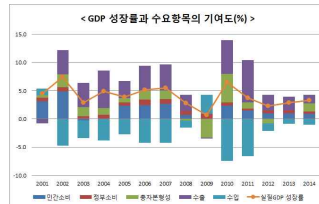
○ 역사인식문제로 기인한 한일관계의 악화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, 양국은 공통 이익을 재확인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됨

□ 한일관계의 악화와 양국 경제의 변화

-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‘정상회담’까지는 실현시키지 못함
- 한일관계의 악화, 엔저·원고로 인한 한국경제의 침체 등이 겹쳐 양국 간 무역액은 '1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
- 한일관계의 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은 한국 입장에서 안보 및 경제 양면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임
-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 안보 및 경제 양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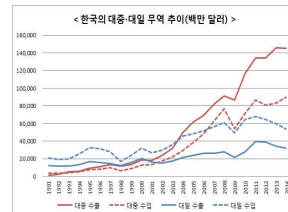
□ 중국의 성장 둔화, 한국의 수출 감소

- 한국경제는 '11년 이후 실질GDP 성장률이 2~3%대로 추이, '15.1분기는 전년대비 2.5%로 2000년대에 비해 침체 상태
- 저성장 요인으로 수출주도형 성장이 부진, '12~14년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200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



자료 : 한국은행

- 2000년대에 들어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對中 수출의존도가 상승, '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는 對中 수출증가가 수출 전체를 견인
-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증가, 중국 현지의 소득 상승으로 소비재 수출도 증가
- 최근 중국경제가 감속하고 있는 것, 중국이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對中 수출이 감소
- 중국이 구조개혁을 우선하고 약 7% 정도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「뉴노멀(신창타이·新常态)」로 이행하는 것은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만, 한국에게는 차이나쇼크가 될 우려가 있음
-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 자원국의 성장 감속, 해운이나 조선 수요의 감소,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철강이나 석유화학제품의 시장 악화 등
- 비교적 순조롭게 추이해 온 ASEAN 국가들의 對中 수출 감소가 성장을 감소시켜 이것이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등 차이나쇼크의 영향이 확대
- 최근 원고의 진행도 수출과 기업 업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
- '13.7월부터 '14.6월까지 원은 달러당 9.6% 절상, 같은 시기에 對원으로 11.9% 절상되는 원고가 진행
- 원고의 진행은 경합후자의 확대에 기인한 것인데, 이것은 투자 감소에 의한 생산재 수입의 감소가 주요 요인인 「불황형 흑자」임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저성장이 지속되는 요인
-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서야 「창조경제」의 실현을 포함한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을 수립
- 창조경제는 주요 도시에 「창조경제혁신센터」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자체나 대기업, 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벤치기업의 육성을 의도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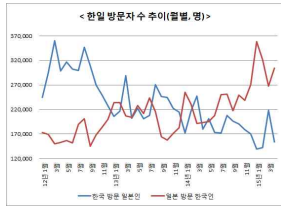
□ 한국의 경제대책

- 새로운 경제사회의 구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작년부터 경기대책에 주력
- 단기 경기대책으로 46조원의 자금 투입, 부동산융자규제의 일부 완화, 경기 자극을 목적으로 한 세제 개편, 경기 확장을 위한 '15년도 예산 편성 등
 - * '15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.6조 원 증가한 375.4조 원
- 세제 개편 내용은 (1)임금을 인상시킨 기업에게 증가분의 10%(대기업은 5%)를 세액 공제, (2)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, (3)투자, 임금 인상, 배당 등의 지출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과세하는 등 가계소득의 증대 목적
- 한국은행은 '14.8월, 10월, '15.3월 금리 인하를 실시, 부동산융자규제의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, 금융완화와 배당증가 등을 배경으로 추가 상승
- 하지만 '15.1분기의 성장률은 전기대비 +0.8%(14.4분기는 +0.3%)로 증가했지만 전년동기대비에는 +2.5%(14.4분기는 +2.7%)에 그쳐 경제대책의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
-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요인은 내·외수의 침체와 기업수익의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민간소비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(1)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, (2)비소비 지출(채무 반제와 사회보험 부담 등)의 증가, (3)소비성향의 감소 등이 요인

- '15.1분기에는 주택가격과 주가의 상승, 원유가격 하락에 의한 구매력 상승으로 인한 실질GNI(국민소득)의 증가 등으로 '15년 중반에는 민간소비의 확대가 기대되지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
- 한국은행은 경기 악화를 예방할 목적으로 6월 11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지만, 잇단 금리 인하로 가계채무(특히 주택론)가 급격하게 증가

㉓ 한일 경제에 대한 영향

- 한일관계의 악화와 급속한 엔저·원고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이 감소
- 일본인 방문객이 많은 호텔이나 쇼퍼타운은 큰 타격을 입었음
- 메르스 영향으로 향후 일본인 방문객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
- 한국의 對日 무역이 '11년을 피크로 '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소
- 대일 수출에서 한류의 상징이었던 막걸리의 매출이 급속히 감소, 일본으로 진출한 이랜드(의류)나 아모레퍼시픽(화장품) 등이 채산 악화로 일본시장에서 철수
- 한국경제의 침체, 특히 수출 감소로 인해 일본에서 생산제(원재료, 부품, 제조장치 등)의 수입이 감소
- 일본의 對韓 투자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엔고로 인한 현지생산 확대로 '12년에 전년대비 약 2배로 급증
- 이후 엔고 시정, 한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일본의 對韓 투자 감점이 악화
- 과거에는 정부 간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경제에 대한 영향은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「政經分離(정경분리)」가 어려워지고 있음
- 한일 경제관계는 글로벌 한국 대기업과 서플라이어로서의 일본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
- 하지만 최근 양국 경제단체 등이 한국인 강제노동자 문제나 정상회담의 실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한일 경제계가 양국 관계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

자료 : 한국관광공사, 일본정부관광국

㉔ 한일 공통 이익의 재인식

- 한일 관계의 악화는 양국 공통 이익의 구현을 방해
- 한일 간에 형성된 서플라이체인 위에 한일 FTA의 체결과 향만을 중심으로 한 심리스(seamless)한 유통망(예를 들어 트레일러 새시의 공동화)의 정비를 실현할 수 있으면 경제의 일체화를 강화할 수 있는데, 한일 FTA 협상은 계속 중단되고 있음
-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대책이나 인프라 정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양국의 연계는 충분하지 않음
- 또한 한국은 '18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이미 초 고령화 사회인 일본과의 공동 대응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
- 현재 필요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양국의 공통 이익을 재인식한 다음 이를 구현화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임
- 일본정부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역사인식문제를 대응하고,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. **KICF**